

經濟週評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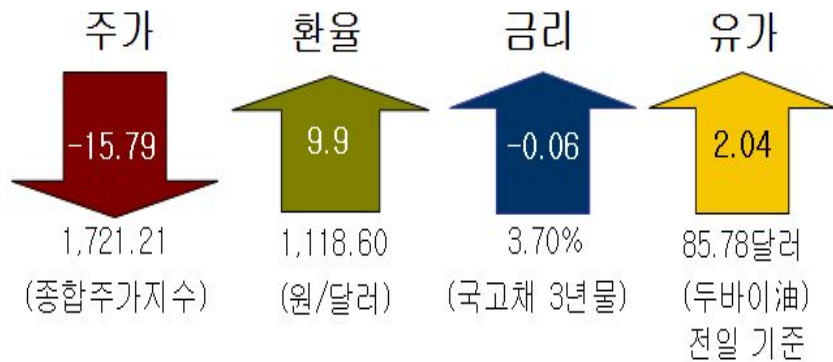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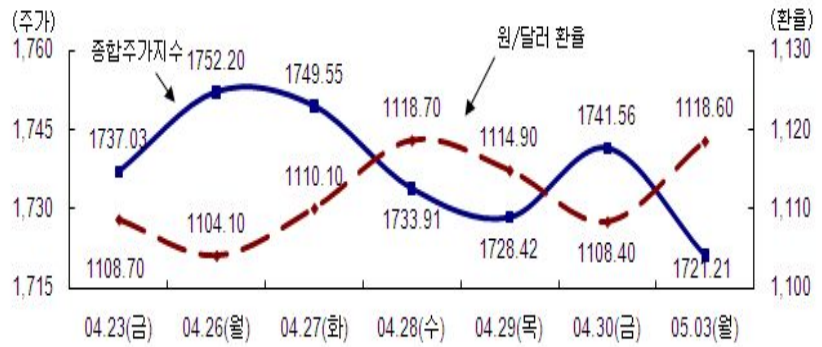
10-17(통권 397호)
2010.05.03



■ 김정일 위원장 방중과 시사점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4.23~5.3)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김정일 위원장 방중과 시사점	1
주요 국내 외 경제지표	8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최 성 근 선임 연구원 (2072-6223, csk01@hri.co.kr)

Executive Summary

□ 김정일 위원장 방중과 시사점

■ 김정일 위원장 방중 배경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현재 북한이 처한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적 여건상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전략적인 판단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 방중 목적과 의제

(방중 목적)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의 목적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화폐개혁 이후 가중되고 있는 식량난과 경제난 극복을 위해 중국의 대북 지원을 얻고자 함이다. 둘째, 북중 경협 강화를 통해 대외 개방과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코자 함이다. 셋째,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입장을 조율하고, 회담 복귀 여부를 협의하기 위해서이다. 넷째, 3남 김정일의 후계 구도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함이다.

(방중 예상 의제) 정치적으로 볼 때,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평화협정 체결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북미평화협정 체결방안과 관련하여 회담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절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과 관련한 논의는 북한이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만큼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대북 지원과 대북 투자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나진항 개발과 관련한 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본격적인 외자 유치를 위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6자회담 재개 전망) 김 위원장의 방중시 북한은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의 중재하에 북미 양자회담 → 6자 예비회담 → 6자 본회담 재개 등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국가들의 입장이 차이가 나는 만큼, 당분간 입장 조율을 위한 조정기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남북간 고조되어 온 긴장도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북중경협 강화 및 대중 의존 심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신호는 중국이 대북 경제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을 마련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동북3성 주변의 대북 투자와 북중 경협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접경지역의 중국 경제권으로 편입, 북한 지하자원의 중국 독식, 북한 소비시장과 유통 시장들의 중국 자본에 의한 잠식, 대북 관광 사업 독점 현상 등이 예상된다.

■ 시사점과 대응 전략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6자회담 등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남북 관계의 전환이라는 기회 요인과 북중 경협 심화에 따른 대중 의존 심화 경색 국면 지속이라는 위협 요인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협요인을 완화하고,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관련 국가들과의 회담 채널 유지 및 공조 강화를 통해 6자회담 재개 국면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해야 한다. 6자회담 재개를 두고 각 국가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인 회담 채널 유지와 교섭을 통해 빈틈없는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북한 경제 개방을 유도하고 대중 의존도 심화를 경계하기 위해 남·북·중 경제협력 구상 및 추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북한 지하자원 공동 개발 및 압록강, 두만강 등 북중 접경지대 개발에 대한 공동 투자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반도의 대화국면을 대비하여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유지를 통해 최소한의 대화 채널 유지와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회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1. 김정일 위원장 방중 일정

○ 김 위원장 방중은 북한의 국내외적인 여건상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전략적인 판단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임

- 5월 3일 오전, 김 위원장은 후진타오 주석과 정치·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4년 4개월 만에 중국을 전격 방문
 - 국제적인 대북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정치·경제적 지원을 얻고자 하는 의도
 - 화폐개혁 이후, 심각해진 경제 상황과 식량난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중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됨
-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의 첫 행선지는 다롄이며, 베이징에서 정상회담 이후 동북 3성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이번 다롄 방문은 나진항 개발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나진항 투자 확대와 개발과 관련한 후속 조치가 예상됨
 - 베이징 방문 이후, 김 위원장은 방중 사상 처음으로 동북 3성 지역을 방문하여, 북중 경협 상황을 시찰할 것으로 보임

< 김정일 위원장 방중 사례와 후속 조치 >

일시	행선지	후속 조치
2000. 5.29~31	베이징	- 남북정상회담 (2000. 6) - 현대아산과 경협합의서 체결 (2000. 8) - 신년사에서 '신사고' 제시 (2001. 1)
2001. 1.15~20	베이징, 상하이	-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발표 (2002. 7) - 신의주, 개성, 금강산 특구 제정 (2002. 9~11)
2004. 4.19~21	베이징, 텐진	-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내각 직속기관으로 격상 (2004. 5) -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신설 (2004. 7)
2006. 1.10~18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	- 개성, 신의주, 금강산, 나선 개방 확대 -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자본 유치 추진
2010. 5. 3~	다롄, 베이징 동북 3성(?)	- 북중 경협 강화, 경제 특구 개발 가속화 - 나진항 개발, 황금평 위화도 개발

2. 방중 목적과 의제

○ (방중 목적) 중국의 대북 지원 요청과 경제협력 강화, 그리고 6자회담 재개 입장 조율, 후계 구도 지원이 주된 목적임

- 첫째, 화폐개혁 이후 가중되고 있는 식량난 극복을 위해 중국의 대북 지원을 얻고자 함
 - 최근 장마당을 다시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쌀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공급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 특히, 식량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대북 식량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0만~120만 톤의 식량부족이 예상¹⁾
- 둘째, 북중 경협 강화를 통해 대외 개방과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코자 함
 - 신년공동사설에서 밝힌 대외개방 기조에 따라 외자유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측의 대북 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
 - 특히, 중국의 동북3성 개발에 편승하여 압록강 및 두만강 개발을 가속화함으로써 인프라 건설 등 외자 유치의 기반 마련 필요
- 셋째,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입장을 조율하고, 회담 복귀 여부를 협의하기 위함
 -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NPT재검토회의 개최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여론 악화 우려
 -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대북 지원과 경제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6자회담 복귀를 바라는 중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 고려
 - 북한은 지난 해 7월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했으나, 6자회담 재개 논의에서 대북 제재 국면의 돌파구를 찾을 수 밖에 없음

1) 연합뉴스, “〈인터뷰〉 `北식량 전문가` 권태진 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 2010. 3. 31.

- **넷째, 중국의 3남 김정은의 후계 구도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 논란이 되고 있는 후계체제에 대해서 중국의 지지 속에 후계자를 공식화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판단 작용 가능성
 - 중국이 세습을 반대하는 입장이나, 김 위원장의 건강을 고려할 때 어떤 모양으로든 후계 구도에 대한 중국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
- **(방중 예상 의제) 정치적으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평화협정 체결 방안이, 경제적으로 중국의 대북 지원과 투자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임**
 - **정치적 의제 :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 방안 및 김 위원장의 후계 구도 지원 등**
 -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김 위원장을 강력하게 설득할 것으로 전망
 - 특히,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평화협정 체결방안과 관련하여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절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예상
 - 천안함 사건은 의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다뤄지더라도 중국이 우려를 표명하고 북측이 책임을 부인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임
 - 한편, 反김정은 세력 확대를 억제하고, 후계 구도의 조기 수습을 위해 김정은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 또는 암묵적 지지 요청 가능성도 존재
 - **경제적 의제 : 대북 식량 지원과 동북3성 개발과 연계된 중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 방안 등**
 - 춘궁기를 맞이하여 심각한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요청할 예상
 - 대북 제재와 화폐 개혁으로 인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의 대규모 설비 투자와 원유 등의 전략 물자 원조를 요청할 가능성
 -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나진항 개발과 주변 지역 인프라 및 배후 산업지대 개발, 청진항 연계 등의 다양한 개발 논의가 이뤄질 전망
 - 위화도·황금평의 자유무역지대 개발과 중국의 투자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임

3.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 **방중 이후,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과 6자회담 재개 노력이 이뤄질 경우,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대화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 존재**

- 6자회담 재개 가능성

- 중국 측의 복귀 설득과 당면한 경제난을 자력으로 타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은 6자회담 복귀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힐 전망
- 중국은 천안함 사건 이전에 북미 양자회담 → 6자 예비회담 → 본 회담 재개의 3단계 수순을 관련국들에게 통보
- 따라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시, 의장국인 중국은 북미 양자회담 및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중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
- 미국은 이미 천안함 조사가 6자회담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도 있음
- 단, 천안함 사건의 조사 결과가 명확한 북측의 책임으로 결론이 날 경우 6자회담의 재개는 보다 시간이 소요될 전망

- 남북 관계의 전환 가능성

-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고 미국과 중국의 6자회담 재개 동참을 요구할 경우, 한국도 이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수단인 만큼 6자회담 재개시 정부의 참여가 불가피
- 6자회담 재개로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이어질 경우, 경색 국면에 있는 남북 간 대화 재개 분위기가 점차 조성될 것으로 보임
- 특히, 대화 국면의 전개시 복합적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 가능성도 존재

○ 한편, 북한의 6자회담 복귀로 대규모의 대북 지원과 북중 경협이 확대 강화되는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대북 경제적 지원

- 김 위원장의 방중에 따른 6자회담 복귀 신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줄 것으로 보임
- 특히, 북한의 시급한 식량난 해결을 위한 대규모 식량 지원과 원유 등의 전략물자의 원조가 이뤄질 전망
-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신호는 의장국인 중국의 외교적 입지를 더욱 강화 시켜줌으로써 양측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 일치

- 북중 경협 강화

- 나진·선봉항, 청진항 등의 개발 사업과 창지투 개방 선도구를 비롯한 동북3성 개발의 연계 사업 및 접경 지역(훈춘)의 산업단지 건설 및 물류와 유통 산업 활성화 전망
-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시작으로 단동-신의주를 거점으로 한 교역 확대 및 위화도·황금평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배후 산업단지 조성 추진 전망

- 대중 의존 심화

- 2000년 이후 북중 교역은 남북 교역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연평균 23.2%의 높은 증가율 나타냄
- 접경지역의 중국 경제권으로 편입과 북한 지하자원의 중국 독식 및 북한 소비시장과 물류 및 유통 시장들의 중국 자본에 의한 잠식 우려
- 금강산을 비롯하여 나진·선봉 지역 등 북한의 북중 관광 협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중국의 북한 관광 사업 독점 우려
- 북한 지하자원의 중국 독식 및 북한 소비시장과 물류 및 유통 시장들의 중국 자본에 의한 잠식, 대북 관광 사업 독점 현상 등이 예상

< 북한의 중국 남한 교역 실적 >

(단위 :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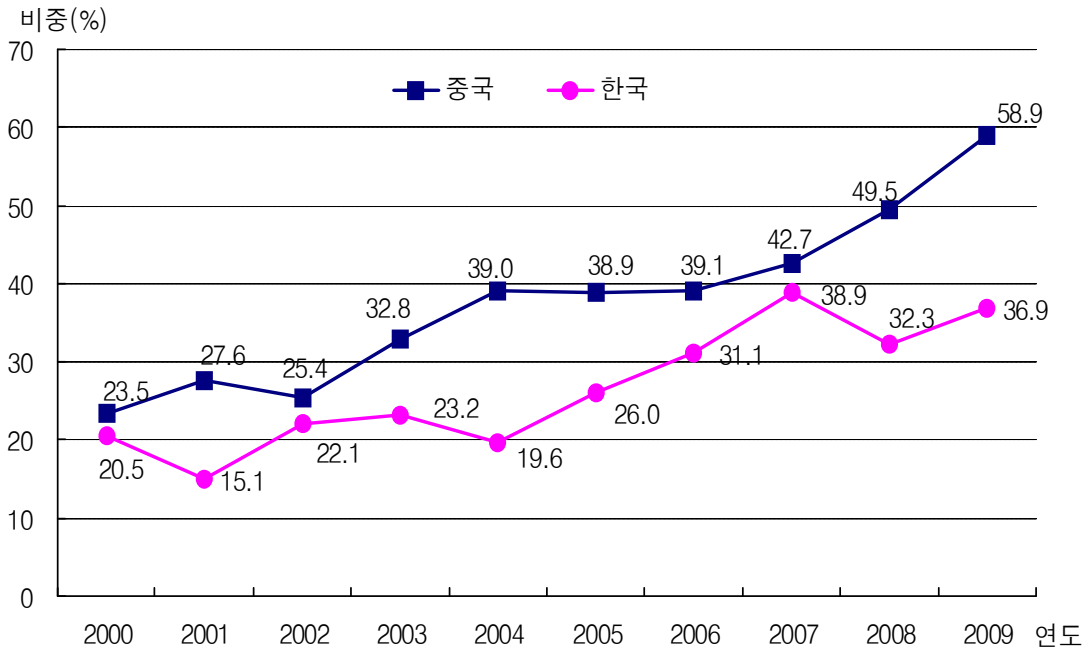
연도	중국			한국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2000	488.0	31.8	23.5	425.1	27.5	20.5
2001	737.4	51.1	27.6	403.0	-5.2	15.1
2002	738.0	0.1	25.4	641.7	59.2	22.1
2003	1,022.9	38.6	32.8	724.2	12.9	23.2
2004	1,385.2	35.4	39.0	697.0	-3.8	19.6
2005	1,580.3	14.1	38.9	1,055.8	51.5	26.0
2006	1,699.6	7.5	39.1	1,349.7	27.8	31.1
2007	1,974.0	16.1	42.7	1,797.9	33.2	38.9
2008	2,787.3	41.2	49.5	1,820.3	1.2	32.3
2009	2,680.8	-3.8	58.9	1,679.1	-7.7	36.9

자료 : KOTRA, KDI, 통일부

주 : 1) 2009년 교역 비중은 교역액 조사가 가능한 중국, 한국, 유럽과의 교역을 북한 전체 교역액으로 가정하고 산출하였음

2) 증가율은 전년대비, 비중은 전체 교역량에서 각국 교역이 차지하는 비율임

< 북한의 대중·대남 교역 비중 추이 >



4. 시사점과 활용 방안

○ (시사점) 방중 이후, 6자회담 등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남북 관계는 새로운 기회와 위협 요인이 나타나 기로에 설 것으로 예상됨

- 기회 요인 : 6자회담이 다시 가동되고, 한반도의 대화 국면이 전개되면서, 경색된 남북 관계도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
- 위협 요인 : 동북3성 주변의 대북 투자와 북중 경협이 심화로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남북 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 증대

○ (활용 방안) 위협 요인을 완화하고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6자회담의 이니셔티브 확보, 남·북·중 경제협력 구상 및 인도적 지원 유지 등이 필요

- 6자회담 이니셔티브 확보 : 6자회담 재개가능성에 대비한 공조체제 강화
 - 6자회담 재개를 두고 각 국가들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인 회담채널을 유지하고 빈틈없는 공조체제 구축
 - 향후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고위급 회담 정례화를 통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 국면의 주도
- 남·북·중 경제 협력 구상 : 중장기적으로 대화 국면에 대비하여 북한 경제 개방 유도를 위해 북한 중국과의 공동 사업 및 경협 계획 구상
 - 북한의 중국을 통한 개방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대중 의존도 심화에 따른 악영향을 완화시키는 대책과 계획 마련
 - 북한 지하자원 개발, 나진항·청진항 개발, 위화도·황금평 자유무역지대 개발 등에 중국과 공동 참여를 통해 남·북·중 경제 협력 도모
- 대북 인도적 지원 유지 :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유지함으로써, 최소한의 남북 대화 채널 유지와 남북 관계의 최악의 상황 회피
 - 1/4분기 대북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쌀·비료 및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이 바람직한 정책과제로 나타남
 - 또한, 중장기적으로 북한 나무심기 사업, 녹색 에너지 협력 등 대북 지원 사업 유지를 통해 남북 관계의 전환에도 대비

최성근 선임연구원 (csk01@hri.co.kr, 2072-6223)